

# 흥미진진 공주

2026년 2월호



겨울 끝에서 만나는 공산성 만하루 | 금성동 165

# 의회 소식

## **2026년 공주시의회 연간 회기 운영계획** (총 8회 107일 / 정례회 2회 49일, 임시회 6회 58일)

월	회 기	주 요 내 용	비 고
1월	제263회 임시회 01. 19. ~ 01. 20. (2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주시 초고압 송전선로 백지화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서 작성 등</li> </ul>	
2월	제264회 임시회 02. 03. ~ 02. 09. (7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안 등 의안 심의</li> <li>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li> <li>※ 결산검사 기간 : 4. 1. ~ 4. 20. / 결산서 등 제출 : 5. 31.까지</li> </ul>	설 연휴 (02. 16. ~ 02. 18.)
3월	제265회 임시회 03. 16. ~ 03. 30. (15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안 등 의안 심의</li> <li>주요사업장 현장방문</li> <li>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li> </ul>	
4월		지역 의정활동	
5월 ~ 6월		[제10대 의회 원구성 준비 등]	지방선거 (06. 03.)
7월	제266회 임시회 07. 07. ~ 07. 14. (8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0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li> <li>-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7.7.)</li> <li>- 상임위원 선임(7.7.)</li> </ul>	제10대 의회 개원 임시회
7월 ~ 8월	제267회 임시회 07. 27. ~ 08. 10. (15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안 등 의안 심의</li> <li>2026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li> <li>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li> <li>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감사계획서 작성</li> <li>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li> </ul>	을지연습 (08. 18. ~ 08. 21.)
9월	제268회 정례회 09. 01. ~ 09. 21. (21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안 등 의안 심의</li> <li>2026년도 행정사무감사</li> <li>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li> <li>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li> </ul>	제1차 정례회  추석 연휴 (09. 24. ~ 09. 27.)
10월	제269회 임시회 10. 20. ~ 10. 30. (11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안 등 의안 심의</li> <li>주요사업장 현장방문</li> <li>2026년 시정에 대한 질문</li> <li>2027년 출자·출연안 심의</li> </ul>	백제문화제 (미 정)
11월 ~ 12월	제270회 정례회 11. 20. ~ 12. 17. (28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안 등 의안 심의</li> <li>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li> <li>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li> </ul>	제2차 정례회

※ 위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왕도심 달빛 상점가 조성에 관한 제언



공주시의회 부의장  
이용성

공주시 인구는 10년간 1만 4천여명 이상 감소했다. 왕도심은 특히 고령화와 상가 공실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제민천, 중동, 웅진동 등 왕도심은 주말과 낮에는 행정상권 기능으로 어느 정도 유동이 있으나, 저녁 6시 이후 급격히 인구가 빠지는 구조다. 실제 생활인구 분석에도 왕도심은 방문은 있지만, 머무름은 적은 지역으로 나타난다. 왕도심 골목 상권의 대표 격인 중동 147 골목은 감성과 역사 잠재력은 높으나, 야간 체류 상권으로 전환되지 못한 상태이다. 즉, 왕도심은 “잠재력은 높지만, 저녁 경제가 사실상 비어있는 지역이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달빛 상점가’가 꼭 필요하다. 왕도심은 공주에서 야간 상권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공산성의 야경, 제민천의 야간 산책로, 왕도심 특유의 골목 정취, 문화의 거리, 갤러리, 공방 등 기존 기반은 이미 충분하다.

이 자원을 야간까지 연결해 주는 장치가 지금은 부족하다. 달빛 상점가는 이 ‘밤의 지원’을 체류와 소비로 전환하는 핵심 전략이다. 하지만 문제점도 분명하다. 저녁 영업 점포가 적다. 상권 간 역할이 중복되기도 한다. 지금은 굉장히 밝아졌으나 말 그대로 밝은 곳은 밝고 어두운 곳은 여전히 어둡다. 또한 상인과 청년들의 참여 유도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달빛 상점가는 또 하나의 ‘반짝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왕도심 상권 역할의 재정비 즉, 왕도심 마스터플랜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산성시장은 전통과 먹거리, 중동 147 골목은 주점, 카페, 소규모 식당, 웅진동은 역사와 문화, 이런 가운데 달빛 상점가를 통해 야간 체류 특화의 중심축을 설계해 왕도심 전체를 하나의 상권 클러스터로 묶는 전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야간영업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가령 야간영업 점포 전기요금 지원과 골목 조명, 간판, 파사드 개선 사업과 더불어 청년 점포 임대료·리모델링 일부 지원, 그리고 상인과 행정이 함께하는 ‘달빛 기획단’을 구성해야 한다.

왕도심은 고령 점포가 많다. 그렇기에 신시가지보다 강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공산성 - 왕도심 - 금강 - 제민천을 잇는 ‘야간 동선’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야간 동선 구축과 함께 열려있는 상가들의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줘야 한다. 공산성을 시작으로 웅진동 역사문화를 탐방하고, 산성시장, 제민천을 지나 중동 147 골목까지 저녁 산책과 먹거리, 문화 루트를 설계하자. 사람이 흐르는 길이 만들어져야 상권이 살아날 것이다. 아울러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 사업의 시작과 동시에 홍보 또한 유명 인플루언서의 유입도 반드시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매출이 높은 산성시장 내 점포들은 공중파 TV를 통해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고 찾아온다.

아울러, 이런 일련의 행사나 달빛 상점가들이 한 번 행사하고 끝나거나 중도에 문을 닫는다면 의미가 없다. 365일 상권 프로그램으로 지속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매주 시민과 함께하는 소공연과 청년 셀러 야시장, 골목 버스킹, 야간에도 이뤄지는 전시·공예 이벤트, 그리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참여형 골목 축제가 함께해야 한다. 작지만 지속되는 방식으로 365일 늦게까지 열리는 상권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상권 관리체계 도입이 필수이다. 야간 유동 체류 인구를 분석하고 시간대별 카드 매출 변화와 공실률을 추적해야 하며, 신규창업과 폐업 변화의 흐름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 안전과 데이터 기반의 만족도 조사 또한 필요하다. 데이터로 치밀하게 분석하여 진짜 효과를 측정하고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왕도심의 골목은 공주의 역사이며, 공주의 정체성이다. 하지만 지금 왕도심의 밤은 너무나 빨리 어두워지고, 고요하기만 하다. 이제 우리는 왕도심이 가진 밤의 잠재력을 깨워야 한다. 달빛 상점가는 왕도심을 다시 살어나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전략이다. 단순한 상점가가 아니라, 체류·문화·경제가 이어지는 새로운 공주의 밤을 만드는 일이다.

# 의회 소식

##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공주시의회 의원  
송영월

공주시와 시민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단호한 반대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이 사업은 '국가 전력수급 안정'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주시를 통과하는 초고압 송전선로와 대형 송전탑 설치로 인해 지역 환경, 주민 건강, 재산권, 지역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극히 높은 사업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중화 등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조차 회피한 채, 비용 절감과 사업 효율성을 명분으로 지역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공주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역사·문화도시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이며, 우리 도시의 생태·경관·문화유산은 국가적 자산이자 공주시민이 지켜온 정체성이다.

그러한 지역의 핵심 가치 한복판에 초고압 송전선로를 일방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개발 행위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구조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를 용인하라는 요구는 시민에게 감내할 수 없는 희생을 강제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전력공사는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기정 사실화하려 하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정보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으며, 피해 지역 주민들은 사업 내용조차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불안 속에서 갈등을 견디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민주적 통제 원칙과 투명성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공주시민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주민의 생존권·환경권을 침해하는 송전선로 건설이 강행되는 한, 공주시의회는 어떠한 형태의 묵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사업의 전면 중단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에 한국전력공사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공주시민의 동의 없는 강행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둘째, 주민의 생존권·환경권 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지중화 등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즉시 마련하라. 비용을 이유로 시민의 안전을 후 순위로 두는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셋째, 모든 사업 절차에 대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 주민의 동의 없는 절차는 절대로 적법한 공공사업이 될 수 없다.

공주시민은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할 여유가 없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터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도시의 가치는 어떤 판단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공주시의회는 시민의 편에 서서 끝까지 이 문제를 지켜보고, 시민의 권리가 존중되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다.

## 의회의 신뢰는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공주시의회 의원 이범수

공주시의회는 그동안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기관이라고 스스로 말해왔다. 그러나 이제 시민들께서는 이렇게 묻고 있다.

“그렇다면 의회는 누가 견제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의회의 신뢰는 스스로 무너뜨릴 때 한순간에 사라진다.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다. 따라서 의회가 제안하는 조례나 사업은 행정·법·재정의 틀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회 내부를 돌아보면, 이런 원칙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인다. 여러 분야의 지원 조례가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지만, 국비·도비 지원 체계가 이미 갖춰진 사업에 시비를 중복 편성하거나, 재정의 우선순위가 무너질 수 있는 발의가 반복되고 있다.

농업·임업 지원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지역 골목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시민들께서는 묻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특정 분야만 지원하는가?”

조례는 ‘발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실제로 집행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의회 안에서는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정치적 명분만 앞세워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집행부가 실행하기 어렵다고 하면 또 비난하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는 결국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며 시민의 삶도 바꾸지 못한다. 그래서 조례와 예산 심의를 둘러싼 구체적인 문제 사례 중 언론에도 보도된 사례 몇 가지를 시민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로 일부 단체에 특혜를 주는 내용이 포함된 의원 발의 조례이다. 언론에 보도된 후 상임위에서 보류된 바 있다. 문제는 명확하다. 상위법 검토가 부족했고, 집행부와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의원 권한이니 발의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심의 과정에서 법적 근거 부족, 중복 지원, 형평성 문제 등이 드러나 조례는 보류되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의회가 일부 단체를 위한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민에게 보였다는 것이다. 조례는 공주시 전체를 위한 공적 기준이어야 한다. 누군가를 위한 구조를 만드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언론 보도가 되었음에도 문제가 있는 예산을 삭감하지 못한 사례다. 2023년 3차 추경 예산안에서는 도비 3천만원에 시비 8억원을 매칭해 총 8억 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편성돼 올라왔다.

물론 예산을 올린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었다. 그러나 행정·재정적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았고 객관적으로 보아도 과도한 수준이었음에도 우리 의원들은 예산을 삭감하지 못했다. 예산 심의는 시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다. 눈치를 보며 삭감해야 할 예산을 그대로 둔다면 그 순간 의회는 견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의회의 진짜 견제는 집행부를 향해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책과 예산 심의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다.

특정인의 이익과 얽혀 보일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된다면 의회가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특정 분야를 향한 지원이 균형을 잃고 있다면 의회 내부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것이 의회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다.